

‘현역인재’ 조정훈 vs ‘전략공천’ 이지은... 한강벨트 핵심지 맞붙

〈興〉

〈野〉

22대 총선 격전지

마포갑

노웅래 4선 지냈지만 보수세 강해
조정훈 “지금 필요한 개혁 진행해야”
이지은, 노 의원 도움이 승패 ‘관건’

13일 현재 4·10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의 핵심 격전지인 서울 마포갑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지은 전 경무관을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합류한 조정훈 의원이 당내 경선을 뚫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현역 영입인재 1호’인 조 의원과 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이 전 경무관이 맞붙게 된 것이다.

◆마포갑, 노웅래 4선 지냈지만 보수세 강해졌다는 평가

서울 마포갑은 아현동·공덕동·도화동·용강동·대흥동·염리동·신수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지역구는 옆 지역구인 마포을에 비해 보수세가 강한 편인 곳이다.

마포갑은 1992년 이후 8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네번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부터는 민주당이 내리 승리했다. 지역구 현역은 4선 중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하지 않은 지역



국민의힘 ‘현역 영입인재 1호’인 조정훈 의원. /조 의원 측

임에도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의장도 해당 지역에서 5선을 하면서, 2대에 걸쳐 민주당계 정당 지역 조직을 다져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마포에 오래 거주한 이들은 노 의원에 대한 호의, 그리고 그의 부친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마포갑을 ‘해 볼 만한 지역’으로 꼽는 이유가 있다.

일단 지난 20대 대선에서 마포갑 지역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



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이지은 전 경무관. /이 전 경무관 페이스북 갈무리

재명 민주당 후보를 12.27%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등 크게 우세했다. 마포구에서 윤 후보가 가장 크게 이긴 곳은 뉴타운이 있는 아현동이였다. 그만큼 보수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적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난립했다. 노 의원의 불출마를 예상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이유로 들어 지난 달 22일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하고, 26일 이지은 전 경무관을 전략공천했다. 당 결정에 반발하던 노 의원은 지난 2일 승복했다.

◆‘세대교체 선봉장’ 조정훈 “지금 필요한 개혁 진행해야”

22대 총선에서 마포갑을 민주당으로 부터 탈환하기 위해 나선 이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 시민당 출신 비례대표였지만,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으면서 당적을 바꾸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내 경선을 거쳐 신지호 전 의원을 꺾고 마포갑 후보로 선출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마포갑 지역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청산’을 선거 기조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1972년생인 조정훈 의원은 정치권 세대교체의 선봉장으로 꼽힌다. 조 의원 역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근두박질 치느냐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개혁과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의 실수로 선배 세대가 이뤄놓은 개발과 발전을 중단시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지은, 노웅래 손 잡을 수 있을까

이지은 전 경무관은 일선 경찰서 지구대장이 경쟁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하다 경정급 보

직으로 좌천됐다. 민주당은 이지은 전 경무관이나 류삼영 전 총경 등을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모두 격전지에 공천했다.

하지만 이지은 전 경무관은 공천을 받고도 며칠 동안은 선거 운동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해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의원은 하던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일 당 결정에 승복하고 단식을 끝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지역을 돌던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여권에서는 노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 전 경무관이 지역 조직을 수습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이에 노 의원이 이 전 경무관을 얼마나 도와주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단 지역구 현역의원이 승복 선언을 한 것으로도 표 분산 우려는 덜었다는 게 야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전 경무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노 의원과 두 차례 정도 만났다면 “조만간 좀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노 의원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례로, 서울 도봉갑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군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안국경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함께 지역을 돌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비례 신청 오세희 전 소상공인聯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뭉, 회장직 내려놓기 전 후보자 등록 연합회 소속 일부 단체장·단체로부터 ‘지지선언’...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갈릴 듯

소공聯 측 “신청 앞서 사직서 제출” 중기부, 소공연 자체 진상조사 요청 “결과 미진하면 조사권 발동” 검토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에도 일정 시간 회장 행세를 하면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업종별 대표단과 전국광역지회장단 일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까지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도 훼손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관 5조에도 ‘정치관여의 금지’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회장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회장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사이 소공연 집행부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양분되는 등 내용에 휩싸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가운데)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소공연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세희 전 회장의 비례대표 신청과 회장직 사퇴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소공연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권 발동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난 6일 낮 12시까지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 마감과 관련해 “신청자 가운데 서류 제출 시한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서류 제출 시한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매일 접수가 원칙이었다.

첫번째 쟁점은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회장직을 사퇴했느냐다.

소공연을 관리·감독하는 중기부는 회장 사퇴시기를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하고 난 6일 오후계로 인지하고 있다. 중기부가 소공연으로부터 받은 사직서 스캔본에는 날짜만 ‘6일’로 명시돼 있을 뿐 정확한 사퇴시각은 없다.

다만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사직서를 연합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두번째 쟁점은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마감 이튿날인 7일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다.

소공연이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에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을 요청하기위해 6일 오후 4시14분에 보낸 공문에는 오 회장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다. 관련 임원회

의는 12일 오후 4시였다.

오 회장은 또 7일 오후 2시 소공연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중 일부는 OO협회 등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고 단체장 도장까지 날인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단체가 개별 회원사 의견은 무시한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의 ‘입김’이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지지 선언문에는 ‘오세희 후보자는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소상공인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오세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며 지지하는바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단체장들이 지지 선언에 서명한 날짜는 7일로 돼 있다.

특히 지지 선언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인 소공연도 마찬가지다.

법정단체인 소공연 전 회장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더욱 바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단 소공연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상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공개한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주말 사이 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다. 20명 가운데 오 전 회장은 선순위로 배치돼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서예진 기자 bada@